힐 "北 6자회담복귀 조짐 아직은…"

中 중재에 반응 없는 것 실망스러워
마카오 은행 동결은 절대 해제 못해

리자오싱(李肇星) 중국 외교부장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12일 중국 외교부에서 만나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사태에 대한 협의에 나섰으나 중국의 외교적 중재에도 불구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조짐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2일 리자오싱 외교부장 등 중국 관리들과의 회담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북한으로부터 6자회담 복귀 조짐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이 중국의 외교적 노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말해 다소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힐 차관보는 북한이 속히 회담에 복귀하지 않으면 국제적으로 고립될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역사적 순간에 있다고 경고한 뒤 북한과의 양자회담은 6자회담 복귀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고 회담 복귀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밝혀 6자회담에 앞선 북한과의 양자접촉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9·19 공동성명에는 미국과 북한 양자가 협의할 수 있는 사항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6자회담에 복귀하면 그 틀 안에서 북한과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북한을 제외한 5자회동과 관련, 그는 6자회담 진전을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만나야 한다면서도 "5자보다는 6자가 낫지만 (회담이) 없는 것보다는 5자가 낫다"며 차선책으로 5자회동을 택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비공식 6자회담에 대해 힐 차관보는 "(리 부장과의 회동에서) 논의하지 않았다"면서 "공식과 비공식의 차이를 모르겠다"고 다소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 연기와 관련, "중국의 외교적 해결을 기다리는데 데드라인을 두지는 않고 있다. 중국은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리자오싱-힐 회담과 관련, 추이톈카이(崔天凱)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는 두 사람이 6자회담 당사국들에 회담 조기 재개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고만 전했다.

리 부장과 회담에 앞서 힐 차관보는 북한이 6자회담 복귀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금융제재 해제와 관련, "돈세탁은 액수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절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혀 양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북한을 6자회담 테이블로 불러들여 북한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 등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설득 노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힐 차관보는 이날 중국주재 한국 대사 및 일본대사, 러시아대사와 만나 6자회담 문제를 논의했으며 뒤 13일 워싱턴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한편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기 이틀 전인 지난 3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전제로 북·미협의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관계국에 전달했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정찰위성으로 북한의 대포동 2호 발사준비 움직임을 포착한 5월 말 이래 물밑에서 북한과 접촉을 모색했다. 미국과 북한은 6월 중순에 뉴욕에서 극비리에 비공식 협의도 가졌으나 북한이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를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바람에 합의도출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말레이시아 정부는 북한 백남순 외상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콸라룸푸르에서 이달 하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다고 11일 발표해 두 사람이 만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경제 파탄난다" 협상중단 촉구

어제 서울 한미 FTA저지 집회…하루 종일 극심한 교통체증

보수단체 지지집회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제2차 본협상 사흘째인 12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농민, 노동자, 시민단체 회원 수만명이 참가한 '한미FTA저지 2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반(反)FTA 단체 회원 2만5천명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열었으며 오후 4시까지 서울광장으로 행진, 최대 7만명(경찰추산 3만7천명)이 모여 '한미FTA저지 2차 범국민대회'를 시작했다. 이 때문에 집회장소 주변 차량 통행이 제한된데다 하루 종일 비까지 내려 서울 도심은 극심한 교통정체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범국민대회를 주최한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는 "대미경제예속화 및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한국경제를 파탄시킬 한미FTA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협상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후 2시 서울역광장에서 미국노총산별회의와 승리혁신연맹 소속 미국노동계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1만여명이 모여 사전집회를 열었고, 공공연맹 소속 노동자 1천300명은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기획예산처 앞에서 집회 후 서울역 사전집회에 합류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 1만3천명은 서울광장, 농협노조 1천명은 서울 서대문구 농협박물관 앞, 전국빈민연합 800명은 탑골공원, 한총련 150명은 청계광장에서 사전집회를 개최했다.

이병천 강원대 교수와 작가 홍세화씨는 신라호텔 앞에서 협상반대를 위한 1인 릴레이시위를 빗속에서 벌였다.

범국민대회 참가 단체들은 한미FTA 협상 중단을 촉구한 뒤 오후 6시부터 시위대를 4개 방향으로 나눠 청와대를 둘러싸는 '인간띠 잇기' 행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청와대 주변 집회를 불허한 경찰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

한편 선진화국민회의 등 12개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은 오후 2시 서울 종로5가 지하철역 주변에서 한미FTA추진 지지 집회를 열고 1개 차로를 이용해 신라호텔까지 행진했다.

경찰은 이날 전의경 203개 중대(2만4천여명)와 교통경찰 288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으며 검문검색을 강화해 대나무 막대 70여개와 차전놀이 도구 8개를 압수했다.

/연합뉴스

"한미FTA 협상 중단하라" 12일 오후 민주노총 주최로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한미 FTA 반대 집회에 모인 참석자들이 폭우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석, FTA 철폐를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北 미사일 발사에 '매우 불안' 11%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63% "정부대응 안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R)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한 전화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3%가 '지나치게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고 29.0%만이 '차분하고 신중하게 대응했다'고 긍정적으로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또한 미국과 일본 등 유엔을 통한 대북한 강경 제재 움직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3.6%가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답한 반면 37.6%는 '효과도 없이 사태만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 없다'는 견해를 보였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불안감과 관련해서는 '매우 불안'(11.0%), '어느 정도 불안'(39.0%) 등으로 국민의 50.0%가 불안감을 느낀 반면 49.6%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46% 포인트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日 대북제재결의안 고수 부적절"

러 외무장관 비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對北) 제재결의안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12일 모스크바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리 회원국들이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일본이 원하는대로 결의안을 채택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보리에서 검토되고 있는 결의안 자체도 부적절한 것으로서 이는 어떠한 타협의 가능성도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엄정하지만 감정에 치우지지 않는 대응을 요구해왔고, 북한과의 핵협상을 궁지에 몰아넣을 수 있는 위협적인 조치는 안된다는 입장임을 재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측에 대해 "협상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위협이나 일방적인 요구가 아닌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본과 미국, 프랑스 등이 공동 발의한 대북 제재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으로 명시하고 유엔 헌장 제7장에 의거, 경제제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